

정책브리프

Vol 25 | 2022. 5월



대한민국을 물들이는 99%의 중소기업

국내기업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중소기업,
이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경제지도를 완성합니다.

'중앙회 60주년 기념 특별 IDEA 공모전' 대상 수상작

Contents

I. 이슈진단	1	II. 중소기업 정책연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Z세대 고객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ESG 경영 ◆ 중소기업 집단적 거래조건 협의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III. [부록] 중소기업 경기전망	7

최근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MZ세대 고객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ESG 경영 (1/2)

목경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KBIZ정책연구원)

I MZ세대 소비가치와 사회적 책임 실천

-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출생한 밀레니얼(millennial)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에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합친 세대로,
 - 2022년 4월 기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종소비재 시장에서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대임¹⁾
- MZ세대는 타세대 대비 **△자아정체성을 강하게 표현하고(self-esteem) △타인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며(exchange), 이는 주요한 소비가치로 나타남**
 - 소비에서 자아일치성²⁾(self-congruence)과 사회적 가치(social-value)를 바탕으로 개인 차원의 만족 극대화뿐 아니라
 -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력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사회문화·시민·생태환경적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함
- 또한 MZ세대는 자신의 소비가치와 소비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
 - MZ세대들이 공정성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보이콧 행동을 나타내고,
 - 선한 영세기업에 대한 “돈줄” 챌린저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며,

- 환경친화적 제품 구매 인증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것 등이 적극적인 실천 사례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 시장경제에서의 기업은 핵심역량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공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함.
 - ESG 경영도 기업이 매출이나 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달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을 성취할 수 있음을 강조
- 소비자가 기업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행동은 자신이 추구하는 소비 가치를 실행하는 것으로,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활동은 소비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의 구매활동 공유와 소비 확산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2019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MZ세대 2,588명의 소비자책임과 지속가능소비에 대해 분석한 결과,
 - MZ세대들이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책임(소비생활에서 사회적 가치 실천 관련 책무를 다하는 정도)은 지속가능한 소비행동(친환경 제품 구매와 윤리 소비)에 정(+)³⁾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MZ세대 고객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ESG 경영 (2/2)

-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행동(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동참 등)은 소비자책임을 인식하는 MZ세대들의 지속가능소비에 유의한 매개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²⁾

III MZ세대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ESG 경영

- 중소기업은 그동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규모의 한계 (liability of smallness)로 인해 사회적 책임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에서 ESG 경영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2021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 중소기업 중에 거래처로부터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 경영 등의 ESG 관련 정보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12.0%로 낮은 수준이나,
 -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53.3%인 것으로 나타났고,
 - 특히 매출액 300억 이상 기업·수출기업· 대기업 납품기업에서 ESG 경영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중소기업의 발전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기업 경영 환경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행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중소기업의 ESG 경영은 기업책임행동 압력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측(Pull) 요인들에 대응하면서
- 소비자측(Push) 동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음.
- 소비자측 동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MZ세대 고객들이 사회적 가치와 ESG 경영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 이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노력을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MZ세대 고객들의 신뢰와 충성도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노력을 지원하고 MZ세대 고객가치에 부응하는 경영성과를 원활히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정부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 15~39세 인구 15,492천명, 생산가능인구 9,800천명으로 동 연령층 인구대비 63%(<https://kosis.kr>)

2) 소비에서 자아일치성 : 소비자의 자아와 브랜드특성간의 일치 정도(fit)를 의미함

3) 김미예, 옥경영(2021), MZ세대의 소비자책임인식, 소비자 교육이 지속가능소비에 미치는 영향: 기업책임행동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최근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중소기업 집단적 거래조건 협의의 필요성 (1/2)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KBIZ정책연구원)

I 일본,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 체결권

- 일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거래 상대방과 집단적으로 거래조건을 협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음

이렇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과 거래 상대방 사이의 거래조건이 결정됨

- 농협, 수협 등 각종 협동조합도 관련법에 따라 거래 상대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체협약의 상대방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거래 상대방으로,

동 제도는 1957년 일본의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 입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단체협약이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인데,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II 호주, 중소기업 단체협상 허용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는 호주에도 법제화되어 있음

호주의 「경쟁소비자법」은 사전에 경쟁소비자위원회에 통지 또는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가 거래 상대방과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작년 6월 단체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별도 제도를 도입,

연간 매출액 1천만 호주달러 이내의 중소기업들에게 경쟁소비자위원회에 사전에 통지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새로운 제도는 ‘등급면제 제도(class exemption)’라고 불리는데,

경쟁소비자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으며,

연간 매출액이 위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일괄적으로 담합 규정을 면제하기 때문

- 호주 기업 중 98.5%인 중소기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시행 후 약 반년 만에 상당한 활용도 보여줌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에 등급면제를 통보한 단체는 2022년 1월말 기준으로 약 33개로 조사되었음

- 등급면제 제도와 별개로 경쟁소비자위원회가 단체 교섭을 통보 받거나 승인한 사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47건에 이툼

III EU, 낙농가 단체협상 허용

- 중소기업에 대한 사례는 아니지만, 유럽연합도 거래 상대방과의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

유럽연합은 2012년 낙농 농가들이 조직한 단체에게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후 전체 농업 생산자 단체로 허용 대상을 확대

중소기업 집단적 거래조건 협의의 필요성 (2/2)

- 이 제도를 통해 유럽연합 내의 농업 생산자들은 집단적으로 도매업자나 가공업자들과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되었음

IV 우리나라의 관련 현황

- 우리나라도 1960년도에 일본법의 영향을 받아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들을 도입하였다가 1990년대 말 폐지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단체적 계약¹⁾ 제도만 남아 있음

「가맹사업법」에 가맹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전체 중소기업에게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음

V 시사점

-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허용하는 단체협상 또는 단체협약 제도는 공통적으로

농어민 또는 중소기업자가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할 경우 교섭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차용하여 중소기업과 농어민에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며,

미국의 「캐퍼-볼스테드법(Capper-Volstead Act)」²⁾도 같은 취지

- 우리나라도 일본, 호주와 같은 국제적인 입법 사례를 참고, 중소기업의 단체협약 제도 도입 검토 필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단체협약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 적용 배제 필요

- 동 제도 도입시 중소기업이 집단적으로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또는 원자재 가격을 협의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편집자 주) 공정위에 따르면 '단체적 계약'은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물량을 배정 받아 납품하는 계약

2) (편집자 주) 「캐퍼-볼스테드법(Capper-Volstead Act)」은 농업인 협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집단적 행위에 대한 내용 규정

중소기업 정책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1/2)

배호영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

I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체성 : 공동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방식은 ‘공동사업’이 본질

- ① 조합원인 개별 중소기업은 제조 등 핵심역량(Core Competence)에만 집중하고,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연구 등의 기능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 될 수 있음
- ② 공동사업은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 산업간 융합 등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정보습득 및 확산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

II 공동사업 수행 중기협동조합 조합원 경영성과

■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중기협동조합 조합원사(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중기협동조합 조합원사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공동사업 수행여부에 따른 중기조합원사 경영성과 비교

(2020년 1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 개)

구 분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률	해당 조합
공동사업 수행 중기조합원사	6,555.6백만원	419.0백만원	6.39%	521개
공동사업 미수행 중기조합원사	4,877.0백만원	239.1백만원	4.90%	183개
전체 중기조합원사	6,196.6백만원	380.1백만원	6.13%	70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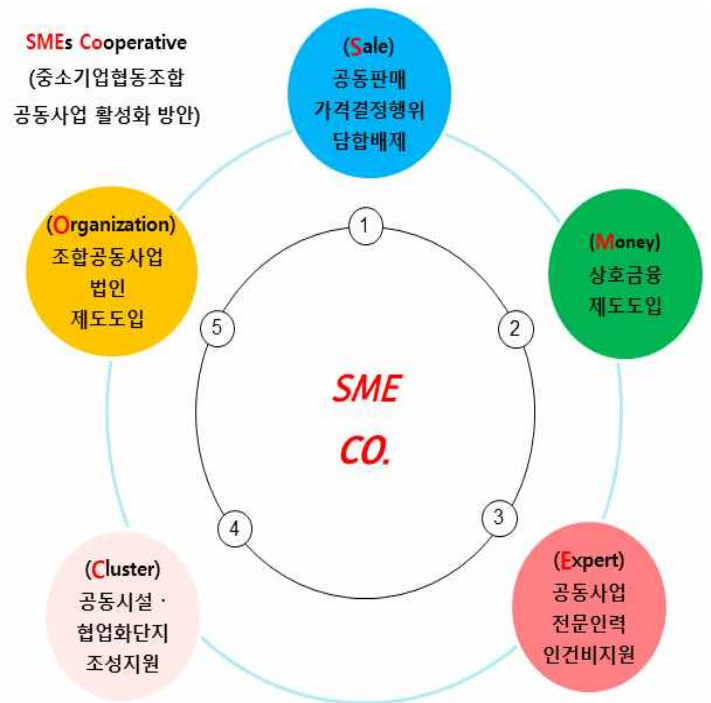
※ ‘2021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결과’ 자료(2020년 12월 기준)를 활용하여 필자가 작성

→ (평균 매출액 비교)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중기조합원사의 평균 매출액(6,555.6백만원)이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중기조합원사의 평균 매출액(4,877.0백만원)에 비해 34.4% 높게 나타남

→ (평균 영업이익 비교)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원사의 평균 영업이익(419.0백만원)이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중기조합원사의 평균 영업이익(239.1백만원)에 비해 75.2% 높게 나타남

→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원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6.39%)이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중기조합원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4.90%)에 비해 30.4% 높게 나타남

III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 SME CO.



① (Sale) 공동판매 가격결정행위 담합배제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독점금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도 일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판매사업 추진시 가격결정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2/2)

- 이러한 공정위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본질인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동사업 수행비율) '2020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결과'(2019년 12월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비율은 56.7% 수준임**

→ (공동사업 수행유형) 공동구매(30.1%), 조달시장 참여(10.0%), 조합원 교육 및 정보제공(9.7%) 순으로 나타나며, **민간내수시장에 대한 공동판매 수행조합은 6.0%에 그침**

-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B2B간 거래에 있어 가격결정 행위는 담합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

② (Money) 상호금융 제도도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자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용도로** 대출 해주는 **정책자금임**(금리: 운전 2.15%±α, 시설 1.95%±α)
- 또한 **전통적 재무정보 중심의 심사기준(중진공 지정 부실 징후·한계기업 등 지원 제외)**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한정** ('21년 협동화자금 승인실적 : 22개 협동조합, 131.9억원)
- 그런데, **협동화자금의 목적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이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협동화자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 이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타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합원을 위한 상호금융(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볼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공제사업 관련 전문성과 전담조직을 가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화자금 운영, 자금대출, 예·적금, 지급보증, 어음할인, 공제사업 등 상호 금융(신용)사업 추진을 제안**

③ (Expert)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지원

- 협동조합의 **미래지향점과 현행 핵심가치가 공동사업으로 수렴**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수익확보의 불확실성, 운영자금 부족, 추진인력 부족 등이 공동사업 활성화를 저해**

→ (공동사업 미수행 이유) '202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수시실태조사결과'(2021년 8월 기준), **공동사업 수익확보의 불확실성(32.0%), 조합원사 사업수요·참여의지 부족(24.2%), 운영자금 부족(13.3%), 공동사업 추진인력 부족(5.5%)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공동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영세성(상근직원 조합당 평균 3.3명, 상근직원이 없는 조합 11.6%)으로 인해 공동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인식개선사업, ESG경영, 디지털전환, 조달제도 등을 전담할 공동사업 전문인력(매니저) 인건비 지원**을 제안

④ (Cluster) 공동시설·협업화단지 조성지원

- 개별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업종별 공동 시설 또는 협업화단지 조성은 해당 업종(산업)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
- 대표적인 **공동시설·협업화단지 사례는 다음과 같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 건립

- 충남 천안 / 수출 유망 농기계 상설 전·시흥보관, 해외 바이어 지원센터, 농기계 교육·체험장, 시험·검사장, 중고농기계유통 등
- 총사업비 129억원 (국비 50%, 지방비 40%, 조합 10%)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회관 건립

- 대구 달성군 / 대구기계부품협동화단지내 위치
- 대구시(설비자금 지원)+중진공(건축자금 지원)
- +대구은행·중소기업은행(임주업체 저리대출)

[한국장류협동조합] 장류회관 건립

- 서울 잠실 / 대지 81.5평, 건물 240평 규모
- 설립자금 각출 방식이 아닌 출자금 증좌방식으로 진행

- 이러한 **우수 사례를 참조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업종별 공동시설·협업화단지 조성지원을 제안**

⑤ (Organization)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도입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이익중심 경영(주식회사식 경영)에 중점을 두고자 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회사 설립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자회사 설립시 **영리법인 성격의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조합공동사업법인'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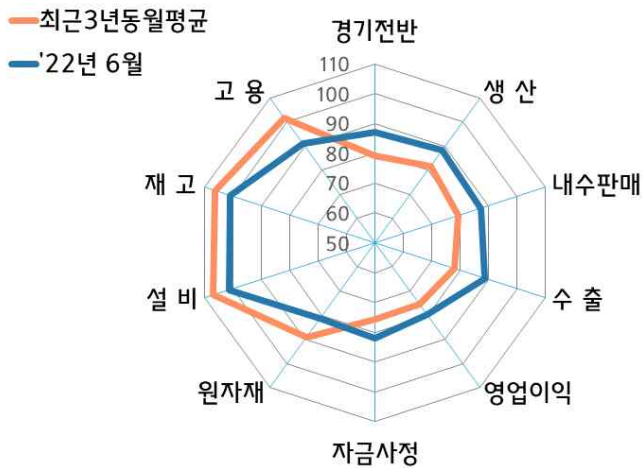
→ **조합공동사업법인 : 세계 혜택(「조세특례제한법」상 9% 단일세율 적용), 1주 1표 원칙(출자액에 비례한 의결권)**

- 이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 도입을 제안**

[부록] 중소기업 경기전망

6월 전망

경기전반	생 산	내수판매	수 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원자재	설 비	재 고	고 용



■ '22년 6월 中企경기전망지수 86.1로 전월대비 1.5p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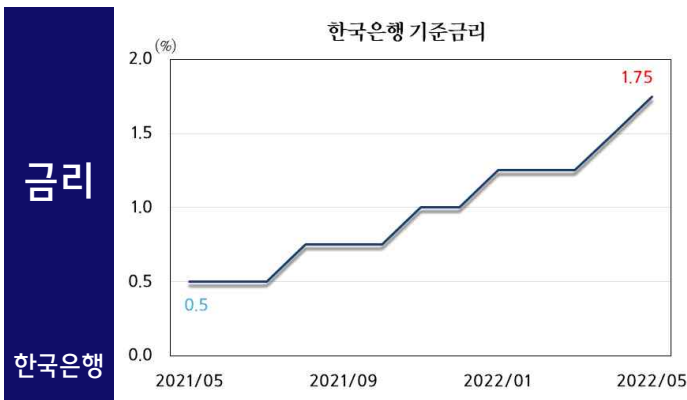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 회복 지연이 하방압력으로 작용
- 제조업은 전월대비 1.7p 하락해 건설업 (1.2p)과 서비스업(1.5p)보다 더 크게 악화될 전망

■ 최근 3년간 동월 SBHI* 항목별 평균과 비교한 결과 원자재 전망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 기대

* 100 초과시 긍정 전망 / 설비, 재고, 고용은 역계열 해석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5월 동향



* 지수>50 : 경기확장, 지수<50 : 위축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연구주제 제안
- 기고 및 연구진 참여 신청 (이력서)
- KBIZ정책브리프 운영방안

기타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또는 문의 주실 분들은
kbizlab@kbiz.or.kr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